

JEJU FORUM REVIEW

위기의 한국경제, 혁신이 답이다

reports

윤리경영이 지속가능 기업의 지름길
지속가능개발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interview

제프리 킬
유안 그레이엄
세타팟 수티와르트 나루에팟

2016-3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JEJU FORUM REVIEW

제3호 | 2016-3

prologue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

reports

01 윤리경영이 지속가능 기업의 지름길 6

02 지속가능개발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15

interview

제프리 킬 20

유안 그레이엄 23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풋 26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016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란 주제 아래 이 시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듯 아시아가 국제사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 창출에는 협력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사회 주역은 군사·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가치와 질서를 선도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소프트파워를 수반할 때 제 구실을 다했다. 이제 아시아가 협력적 리더십의 중심점이 돼 다양한 계층·민족·문화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7년은 새 유엔 사무총장 취임, 미국 등 주요국 리더십 교체, ASEAN 출범 50주년, 브렉시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협정 Post 2020 등 범세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포럼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제주포럼 리뷰>가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2001년 출범한 제주포럼은 매년 5월 전·현직 국가지도자, 오피니언리더, 정책입안자, 언론인 등 세계 지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협력 논의의 장이다.

<제주포럼 리뷰>는 올해 제주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7개 키워

드로 정리, 연관성 있는 내용을 묶어 네 권으로 엮었다. 각 권은 주제별 정책제안 성격의 요약 보고와 주요 연사를 직접 만나 관련사항에 대해 들은 인터뷰로 구성됐다.

2016-1호는 ‘아시아, 협력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협력적 리더십과 한중일 3국 협력을 다뤘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창립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 박사와 양허우란(Yang Houla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인터뷰를 실었다. 2호는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조건’을 주제로 핵 안보와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옌쉐퉁(Yan Xuetong)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이브 티베르기엥(Yves Tiberghie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인터뷰를 담았다.

3호는 ‘위기의 한국경제, 혁신이 답이다’를 주제로 경제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기업 인권, 지원 방안들을 다뤘고, 세타푃 수티와르트 나루에푃(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미래재단 대표이사,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 제프리 킬(Geoffrey Till)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 인터뷰를 게재했다. 4호는 ‘지속가능 개발의 최전선, 제주’를 주제로 글로벌 제주 발전전략을 환경, 문화 관광 측면에서 다루고, 김숙전 주유엔대표부 대사와 셴딩리(Shen Dingli)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reports

01 윤리경영이 지속가능 기업의 지름길

02 지속가능개발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01 윤리경영이 지속가능 기업의 지름길

한국경제가 양극화와 저성장, 장기 침체라는 삼중고에 빠져 있다. 이러한 위기는 생산과 분배의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극복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은 경제 구조, 나아가 국가 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제11회 제주포럼은 한국경제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등 각 경제 주체의 역할을 모색했다. 관련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인권 개선, 윤리 경영, 여성 참여도 제고 등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독일 최고기업이 제시하는 위기극복 방안

21세기 들어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신기후체제 등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그만큼 중요한 시대다. 세계적인 전기 전자기업 지멘스의 조 케저(Joe Kaeser) 회장은 ‘통일한국,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세션에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국가와 기업은 뒤처질 수밖에 없다. 비즈니스와 사회를 재창조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로 인한 갑작스러운 통일 이후 지멘스는 11개

동독 기업을 인수하고 동독 지역에서 2만여 명을 신규 채용했다. 독일경제가 처한 위기를 사회통합과 구조개혁으로 정면 돌파해낸 것이다. 케저 회장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이 사회변화에 적응하는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첫째, 기업 구성원들의 목적의식이다. 왜 이 기업에서 일하는지, 업무 중 좌절할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 구성원들이 충분한 동기 부여 조건과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둘째, 역량 개발과 교육이다. 특히 디지털 영역은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협업하고 함께 창출하는 전략이다. 산업 자체가 인재 한 명의 특허 권으로 이뤄졌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 혁신은 협업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케저 회장은 기업 구성원의 ‘사고방식’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지목하면서 글로벌혁신지수(GII)에서 5년 연속 1위를 거머쥔 스위스 국민의 기업가적·혁신적 사고방식을 모범 사례로 꼽았다.

지멘스는 지난 10여 년간 사업 포트폴리오를 50% 이상 바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혁신과 변화를 이뤄냈다. 케저 회장은 성공 동력을 △기업 구성원의 주인의식 △변화를 가능하게 만든 리더십 △직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한 시스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윤리의식 등 여섯 가지로 설명했다.

상하수직적 명령 구조가 아닌 협업을 중시하는 선지자적 리더십과 구성원들의 상호교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디지털화나 데이터가 대신할 수 없는 사회적 지능 교육이 필수다.

혁신하는 글로벌 기업에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케저 회장은 “기업 신뢰의 기본은 법 준수”라 전제하고 “기업의 설립 목적 자체가 이윤 추구 이긴 하지만 기업에게는 사회적 의무와 책임도 있다”라고 말했다. 큰 기업일 수록 책임도 더 크므로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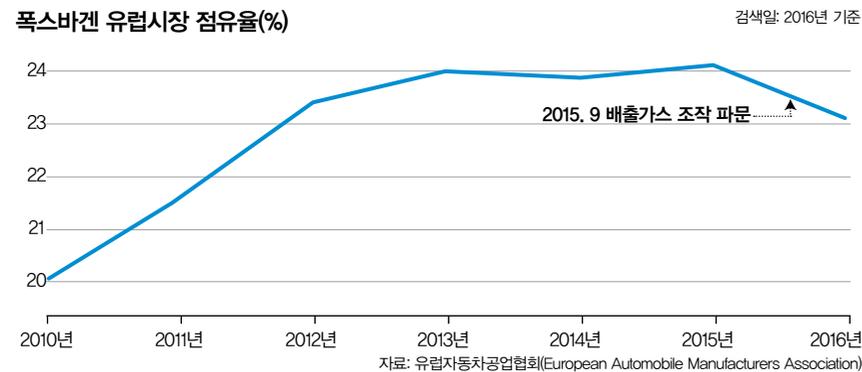
비윤리경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파문을 들 수 있다. 미국 소비자잡지 <컨슈머리포트>에 따르면 2016년 자동차 신뢰도에서 폭스바겐의 순위는 전년 대비 아홉 계단 하락했으며, 2016년 1분기 유럽시

장 점유율은 최근 5년 내 최저를 기록했다. 케저 회장은 “폭스바겐의 연비 문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며, 이 사례만 봐도 기업 경영에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윤리적 기업경영은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가능한 경영을 가능하게 한다. 히사토 후시키(Hushiki Hisato) 일본 윤리연구소 국제사업본부장은 ‘윤리경영이 세계를 바꾼다’ 세션에서 “시대 흐름이 근대화본주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급변하는 이 시대에 윤리경영의 시사점과 그 역할은 매우 크다”라며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후시키 본부장은 기업의 최종 목적을 이윤 추구로 잡은 미국과 일본의 수많은 기업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업이나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핵심은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규복 유한킴벌리 대표이사는 가족친화적 경영 체계를 꾸려 나가는 등 인간중심 경영에 가치와 중점을 둔 결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다”라며 자사의 윤리경영 사례를 소개했다.

기업경영 윤리는 준법사항이 아닌 조직의 문화 또는 조직을 구성하고 꾸려가는 가치관, 시스템을 의미한다. 따라서 윤리가 기업에서 내재화되고 그것이 한 조직의 문화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모든 기업문화 정착과 마찬가지로 윤리 실현 또한 최고경영자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인권경영, 이제 시대적 책무

경제계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떠오른 ‘인권’은 윤리경영의 한 척도라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세션은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과 인권경영 관점에서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각국은 국가 이미지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권에 기반을 둔 경영을 제도화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유엔이 채택한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은 정부와 민간기업,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이 광범위하게 수용하면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표준적인 국제규범으로 정착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세션에서 유엔 이행 지침 실행과 확산을 위한 대안으로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개발 및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유럽연합이 회원국에게 국가별 NAP 수립을 권고한 것과 유엔이 NAP 안내서를 발표한 이후 기업과 인권 NAP 수립·실행은 국제사회의 흐름을 따르는 기업의 시대적 책무가 되고 있다.

기업이 현실에 부합하는 적절한 인권경영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모와 업종 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도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장에게 인권경영 시행을 요구하고 그 성과를 공개해 평가항목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이 법적 의무가 아닌 탓에 강제할 수 없는 만큼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홍보를 통해 인권경영 기업에 대한 우호적 여론 조성 △인권경영을 실천한 모범 사례 발굴과 정책 지원 △공공 조달에서 인권 요소 고려 등 다양한 권장정책 개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일부 공공기관은 자금 지원과 관련해서 기업의 인권 요소를 고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수출신용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지원 심사 기준에 인권에 대한 부분을 반영키로 했으며,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금융기관 역시 공적 자금 제공 여부를 판단할 때 인권 요소를 고려하

는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국제협력단, 국민연금공단, 한국투자공사 등도 사업 수행 및 투자 시 인권과 관련한 문제를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

유리천장 극복이 곧 경쟁력 강화

유엔글로벌콤팩트는 10대 원칙 중 인권, 특히 여성인권을 으뜸 가치로 여기고 있다. 임홍재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은 ‘여성역량강화와 기업의 지속가능발전’ 세션에서 유엔이 설정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중 다섯 번째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가 경제개발 계획 실현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했다.

이 세션에서는 성별 다양성 확보와 양성평등, 여성역량강화를 통한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 동향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봤다.

여성의 적극적 사회 참여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필수조건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유엔은 여성이 많은 의회일수록 보건, 교육, 인권보호 등 주요 사회 문제에 대한 입법 활동이 더 활발하다는 점을 지목해 왔다.

한국에서도 기업 내 다양성 존중과 성평등 관련 제도가 확산되면서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고 있다. 하지만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이나 채용, 승진, 임금 등은 세계 평균 수준에 비해 여전히 낮다. 2016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조사한 국가별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25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14년째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유영선 전문직여성(BPW) 한국연맹 회장은 이러한 문제의 본질적 요인을 성별 고정관념에 따른 ‘여성의 일’ 과소평가라 분석했다. BPW는 양성평등 사회로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경제적 평등을 꼽는다. 따라서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임금의 날(Equal Pay Da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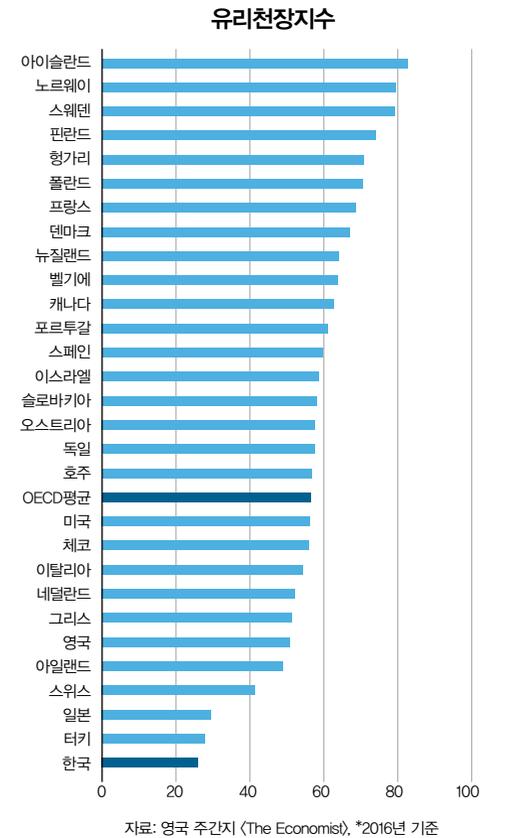
세계에서 성평등이 크게 진전된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스웨덴의 린다

마크테만(Linda Backteman) 주한 대사관 참사관은 “성평등과 여성역량강화는 스웨덴 정부가 의사 결정과 자원 배분 차원에서 우선 추진하는 사항이며, 이는 스웨덴 정부가 여성역량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이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고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성역량강화가 단순히 SDGs의 하나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기업의 우선순위로 인식돼 기업활동 전반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이 앞장서 공공부문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희 풀무원식품(주) 인사기획실장은 우수한 여성인력을 육성·유지해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여성친화 기업 문화를 제시했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업무에 몰입해 역량과 경력을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성역량강화와 양성평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지지도도 불구하고 한국은 아직 이 문제의 인식과 실행이 저조하다고 평가됐다. 민무숙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은 “보육 인프라 확충과 육아제도 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있지만 핵심적 상수는 한국의 후진적인 장시간 근로 문화”라고 지적했다. 민 원장은 가족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노동환경을 재구조화하는 전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여성의 경력 유지와 대표성이 높아지고 양성평등을



위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국내에서 여성의 근속연수 1위를 차지하는 대표적 양성평등 실현 기업이다. 이선주 KT지속가능경영센터 센터장은 “KT는 여성인력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인력 활용 현황을 분석하고 인식 조사에서 나온 시사점을 바탕으로 여성인력 육성 방향을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에게 육아휴직을 2년씩 제공하는 것도 이 제도의 일환이다. 또한 2016년부터는 SDGs와 연계해 여성인력 육성에 더욱 적극적인 투자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풀무원도 여성친화적 기업 중 하나다. 풀무원은 자녀가 있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승격·보상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평가와 보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는 임신부 자동 단축 근무제를 도입하고 2020년까지 여성 임원 30%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

임 사무총장은 두 사례가 유엔 여성역량강화원칙(WEPs)에 부합하는 정책이라 설명하며 국내 기업들이 여성역량강화와 양성평등의 기업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이러한 기업문화를 지원할 때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튼튼하고 건전한 기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스타트업, 이대로 괜찮은가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창업자를 보유한 나라이지만 창업 환경은 최저 수준으로 평가된다. 국내 스타트업의 3년 후 생존율은 41%로 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아시아 스타트업 생태계의 미래’ 세션에서 “실리콘밸리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위험 자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스타트업 분야에서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고 있다”며 “한국은 창업에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의 성장이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건이라고 말한다. ‘새로운 자본시장의 변화와 애널리스트의 역할’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스타트업은 시작 단계이고 대기업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과물이 곧 나올 것이며, 따라서 창조적인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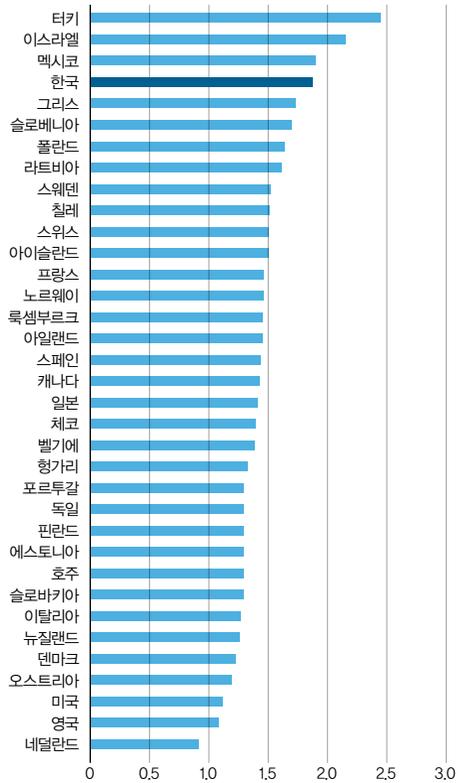
김광현 디캠프 센터장은 “창조적인 스타트업의 성공을 위한 혁신 없이는 성장이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기업들은 스타트업보다는 자체 연구소를 만들어 개발에 치중해 왔다. 하지만 현재는 경쟁이 치열하고 ‘파괴적 혁신’으로 산업의 구조가 빠르게 바뀌고 있어 전통적 관점의 연구 개발로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 김 센터장은 “결국 스타트업에 대한 육성과 인수합병만이 대기업의 생존 방법”이라 조언하며 “모든 것을 재상상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 그 예로 모바일 차량예약 서비스인 ‘우버’나 세차를 대신해주는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를 들었다.

특히 해외 성공사례를 벤치마킹 모델로 제시하며 중국 창업 시장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중국의 창업 시장 열기는 과거 2000년대 초반 한국에 불었던 벤처 붐을 능가하는 수준이다. 김 센터장은 “중국은 자율주행자동차나 무인기(드론), 전기차 등 기술 관련 분야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방법은 ‘창조적 발상’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상생을 통해 기존 세대들이 후세대를 위해 ‘창조적 발상’이 가능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단계가 많다는 점이 스타트업 성공의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정지훈 교수는 세션에서 협회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정책과 이코 시스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문이 많다고 진단했다.

국제 장벽 완화는 스타트업 성공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 중 하나로 꼽힌다. 데이비드 리(David Li) 선전오픈이노베이션랩 디렉터는 “과거에는 시장이 미국과 유럽에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아프리카, 중동 등에도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라며 반드시 국외로 나가지 않아도 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

상품시장규제지수(Product Market Regulation Index)



자료: OECD Product Market Regulation Database(2013), *2013년 기준

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에 있는 많은 국제 학생들과의 교류는 스타트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다. 정 교수는 “국적이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좋은 영향을 주고받아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활성화시키면 마켓이 커지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각종 교류 프로그램으로 인적 교류를 활발하게 만들려면 정부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스타트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이며 동남아시아의 스타트업 허브로 자리매

김했다. 조에리 지아노텐(Joeri Gianotten) 엑셀러아시아 파트너는 뛰어난 인프라와 원활한 영어 커뮤니케이션 등을 싱가포르가 스타트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장점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싱가포르 사례를 참고해 지금까지 국외 진출만을 목표로 삼아 온 것을 넘어 한국이 스타트업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적 수준의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생태계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벤처·스타트업 등 작은 기업의 성패는 결국 기업가정신에서 결정된다. 이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정부의 투자유치 등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창업 생태계가 성장할 수 있다.

02 지속가능개발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위기 극복에는 기업과 시장 혁신이 중요하지만 공공부문이 뒷받침됐을 때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과거의 방식에 안주하는 공공시스템은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장애물로 작용한다. ‘정부혁신과 협력적 거버넌스’ 세션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공부문 혁신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시민 참여로 민관 협력 기반 다지기

정부 혁신은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가능케 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함으로써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향해야 할 구조로 △지도부 구성 전략 △의사 결정 수단 △시민과의 협의, 시민 참여, 시민에 대한 권한 부여 전략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촉진 수단 △책임감 있는 공공행정을 위한 필수적 수단 △효율성과 효과를 보장하는 경영전략을 제시했다. 이들 여섯 개 전략 중 시민 참여가 가장 중요한 요소다.

‘정책 통합: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지역화’ 세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나라마다 개발 수준에 큰 차이가 있고 정치체제와 정부구조도 다르므로 정책

과 전략은 반드시 현지 상황에 입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의 정부정책 결정 참여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경우 관련 법규 부족과 공식자의 낮은 시행 의욕이 저조한 권한 위임과 시민 참여 부족으로 이어진다. 반면 지방정부는 법적 틀이 비교적 잘 갖춰져 있고 공무원들이 주민의 요구와 불만에 노출되는 일이 잦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더 많이 갖는다.

따라서 시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김상목 한국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정부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선택적으로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적절한 법적 틀을 마련해 언제라도 시민사회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혁신과 지속가능한 발전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전략에 맞추는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국가 정책은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세워 상승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정책과 관련해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의견을 같이했다.

윤중수 유엔지속가능개발센터 소장은 각국의 요청에 따라 효과적이고 일관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한 ‘MAPS’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MAPS는 주류화(Mainstreaming), 가속화(Acceleration), 정책 지원(Policy Support)의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주류화는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의제 2030’을 국가 전체와 지역적 수준에서 정착시키고, 전국·광역·지역 단위에서 개발계획을 통합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류화 로드맵은 계획-실행-평가 흐름 안에서 8단계(공공의식 제고→복수의 이해당사자 접근 방식의 적용→SDGs의 전국·지역·촌락 단위 맞춤형→감독, 보고와 책임 소재 규명→정책 간 수평적 연계 구성→정책 간 수직적 조직화→미래를 위한 예산 확보→위험요소 측정과 적응력 배양)로 이뤄진다. 가속화는 개별국가의 사정에 따라 우선 지역에 개발 자원을 집중하면서 계획 간 시너지 효과와 상쇄작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정책 지원은 유엔개발기구 기술과

전문지식이 적절한 시점에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비전에 집중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일차적 노력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와 지자체들은 민간부문과 시민사회, 기타 이해당사자들과의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고 제도화해 혁신을 이뤄야 한다.

한국도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은 이러한 정부의 혁신적 움직임 중 하나로, SDGs 달성을 위해 여러 측면에서 기여하고 있다. 윤중수 소장은 전자정부 서비스가 정부 데이터 공개와 정부-민간 협업을 통한 경제 성장 촉진, 클라우드 컴퓨팅과 모바일 정부 서비스를 이용한 탄력적 인프라 구성, 컴퓨터 도시 관리 시스템과 효율적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구축 등의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딩(Yi Ding) 중국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격자망 형태의 중국 사회서비스 행정은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정보 수집을 활성화하고 각 지역 정부가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도록 도우며 지역정부 간 정보 공유를 촉진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제공과 그 감독을 가능케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전자정부 시스템이 SDGs에 기여하는 사례로 중국의 전국 통합 온라인 서비스를 들며 “이 서비스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수평적, 수직적 정보 공유를 개선해 맞춤형 정보 제공과 공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제 협력, SDGs 달성의 또 다른 과제

정부 혁신을 위해서는 민관 협력적 거버넌스 외에도 국제 협력 또한 중요하다.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에도 ‘국제 협력(Global Partnership)’이 언급돼 있다. ‘지속가능개발목표와 동아시아’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중 지역 협력이 필요한 목표들을 확인하고 동아시아 지역 간의 상호보완적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비슷한 도전과제를 갖고 있는 동아시아 역내 인접 국가들의 지역 차원 협력을 위한 보편적·포괄적·구체적 계획이 필요

하며 이미 수립된 협력 네트워크 간 상호 연계성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박은하 주중 한국대사관 공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경제·환경적으로 연결돼 있어 재난 방지와 회복력 강화 등의 개발 과제를 공유하고 있다”며 “개발 과제의 효율적 달성은 이해관계자들 간 협력적 파트너십을 통해 자원 조달 및 동원의 근본적 변화와 과학기술 혁신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설명했다. 박 공사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역 내 개발 수준 차를 좁힐 수 있는 역내 협력 체제 수립 과정에서 지역과 각국의 규범과 시민사회, 문화, 민간부문 참여 등의 요소도 고려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아태지역 간 협력으로 17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달성하려면 재정적으로 안정된 환경 구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또 민관 협력과 국가 간 협력을 추구해 자본시장을 강화하고 민간부문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interview

영국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

제프리 톨

호주 로위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

유안 그레이엄

태국미래재단 대표이사

세타팟 수티와르트 나루에팟

“제주포럼은 동북아 현안 논의 최적의 플랫폼”

동북아는 북 잠수함, 자연 재해 등 여러 해양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다. 동북아 해양질서와 지역 안보 협력에 대한 견해는?

남중국해 영토 분쟁 등 국가 간 이익을 주장하는 전략적 문제에서 벗어나 지역 협력이란 큰 틀에 집중해야 한다. 협력을 위한 노력에는 경제 상호의존성 강화, 테러에 대응하는 공동 목표의식 고취, 어획 분쟁 해결, 기후 변화 및 환경 오염 공동 대응 등이 있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지?

한반도 내 최우선 과제는 단연 통일 문제다. 분단 국가로 60년 넘게 대치한 채 시간이 흘렀다. 통일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은 아직까지 크게 발휘되지 못하는 듯 보인다. 한국은 미중일 사이에서 관계 정립을 해야 한다. 한국이 원하는 바가 과연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만 봉착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이 경시되면 안 된다.



해양안보 전문가 제프리 톨 박사는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이자 콜벳(Corbett) 해양정책연구소 소장이다. 영국 합동지휘참모대학 전략학 교수,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국제관계대학원 초빙연구위원을 지냈다.

제주도는 2006년 정부가 지정한 ‘세계평화의 섬’이다. ‘세계평화의 섬’ 실천 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한 제주포럼의 중요성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은?

국제관계에 국가 간 협력과 더불어 정례 행사는 큰 탄력을 불어넣는다. 정례 행사를 통해 정체성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매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상그릴라 대화(Shangri-La Dialogue)가 그 대표적인 예다. 상그릴라 대화의 시작은 고위급 지도자가 참석하는 정기적인 모임이었다. 지금은 세계 각국 정상도 참석하는 일종의 외교 행사로 거듭나 정책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논의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포럼은 동북아 사안을 논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상그릴라 대화가 동남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 제주포럼은 동북아의 대표 회의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포럼의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국제회의라 해도 참여 국가의 범주가 명확해야 한다. 현재 제주포럼의 참여 국가가 너무 광범위하다고 생각한다.

평화 정착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싱크탱크의 목적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특정 이슈에 대한 심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대중에게 더 널리 알릴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기 민감한 사안도 제주포럼과 같은 자리에서 싱크탱크 전문가 토론을 통해 대한 민간 차원에서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이것이 발전하면 정책 제안으로까지 이어진다.

interview ●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한국 개발 사례를 국제·지역 모델로 제시해야”

동북아 국가 간 해상 협력을 위한 신뢰 구축 방안은?

해양에서의 신뢰 구축은 분쟁 감소의 주요 요인이다. 따라서 좀 더 실질적인 필요가 있다. 국가별 군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해양 영토는 변하지 않는다. 사고로 인한 해양 분쟁이 국가 간 전략·정책이 되면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긴장 완화를 위해 국가 간 상호 교류가 원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별 제도와 문화가 다른 점을 감안하는 포용적 자세가 필요하다.

몇몇 국가 간 정치적 긴장과 한일, 일러 간 영토 분쟁이 존재하는데도 큰 해상 충돌이 없는 것으로 비춰 볼 때 동북아 지역 내 전반적인 해상 안보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해상 협력을 위한 방어적 외교의 성공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서 한국이 배울 점은 무엇인지?

‘동북아시아 해양 질서와 지역협력’ 세션 사회를 맡았던 이서항 한국해양전략연구소장은 인도양이 해상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한다. 인도양은 인도,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여러 국가 간 분쟁이 수년간 지속됐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과 이에 대한 수용적인 자세로 서로 양보해 상당 부분 해결됐다.



유안 그레이엄 박사는 호주 로워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이다. 해양안보 전문가로 동아시아 연구에 20년간 매진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 라자라트남국제관계대학원 선임연구원, 영국 외무부 연구원, 주평양 영국대사관 대리공사 등을 지냈다.

인도-방글라데시 간에는 규모 차이로 인한 해양 불균형이 존재한다. 이는 중국과 몇몇 주변국의 불균형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인도는 여러 방면에서 크게 양보하며 국제해양재판소 판결을 대부분 수용했다. 이것이 동아시아 지역의 가장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힌 사례는 있었어도 법적으로 이를 이행한 것은 최초다.

협력은 예측하기 힘든 과제다. 국가 간 협력의 기회도 매우 적다. 실질적인 협력은 정치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제주포럼 같은 다자대화 플랫폼이 평화에 기여하는 바는 무엇인지?

한국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실로 많다. 남북이 반세기가 넘게 대치하면서 자국민들은 긴장 속에서 살아간다. 이런 경험이 다른 나라에게 국가 간 정치·경제적 긴장감을 극복하도록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통일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지만 남북한은 현재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전 세계에 좋은 모델이다.

이런 한국에서도 제주도는 특수성을 지닌 곳이다. 동중국해를 마주하고 있는 제주도는 한국의 최남단에 위치하여 북한 문제뿐만 아닌 여러 국제 문제와 연관이 있다. 앞으로의 도전과제는 더 넓은 지역을 보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고민하는 것이다. 한국은 통일과 자국 정치 문제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제주포럼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전 세계 지성을 초대해 그들의 경험과 전문성을 배우는 장을 마련하는 것. 둘째, 포럼 개최를 통해 한국의 전통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를 통해 분쟁의 본질에 대해 언급하고 한국의 개발 경험을 더 넓은 국제·지역적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싱크탱크가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바는?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과 공직자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자유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나는 과거 공직에 있었던 경험 덕분에 발언의 자유가 없는 고충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싱크탱크의 가장 큰 역할은 정부와 대중 간 소통을 돕는 것이다. 싱크탱크의 연구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있다. 이런 제안은 종종 정책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또한 싱크탱크는 외부 견해를 정책 입안자들에게 해석해 주는 역할도 한다. 이를 통해 집단사고(Groupthink)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집단사고는 한 집단의 조직원 간 의견 일치를 유도해 외부 사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대학이나 학계 발간물은 너무 전문적이어서 그 메시지가 정책 입안자에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을 쉬운 말로 풀어 주는 것이 싱크탱크의 일이다. 이렇듯 싱크탱크의 목적은 복잡한 현안을 쉽게 해석해 주는 것이다.

“동북아 번영 가져온 세계화, 그 다음 변화의 원동력은?”

일부 전문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궁극적 목적이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견제하는 것이라고 한다. 성공적인 지역 경제 협력은 어떻게 이뤄지는가?

TPP가 지역 경제 협력체 활성화를 위한 한 가지 수단일 수 있으나 진정으로 성공적인 지역 경제 협력체는 그 이상의 노력이 요구된다. TPP는 기존 무역 중심 협정에서 ‘협정 중심 무역’ 방식을 고수하지만 개발도상국에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TPP의 또 다른 문제점은 참여국의 협상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미국은 일본 등 강대국을 먼저 접촉해 참여를 이끌어 낸 반면 소규모 국가의 요구는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실제로 TPP 초기 가입국은 경제적 요인보다는 지정학적 이유로 선별된 것으로 추정된다.

TPP는 지역 경제 협력 공동체 형성에 중요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 추진 사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좀 더 넓은 의미의 무역 협정과 기초를 같이했다더라면 개발도상국가들에게 더 많은 이득이 있었을 것이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은 무엇인지?

올해 제주포럼의 주제는 시의 적절하다. 새로운 질서를 위한 협력적 리더십에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퓏 박사는 태국의 비영리 경제정책연구기관 태국미래재단 창립자이자 이사장이다.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태국 재정부 정책연구소장, 시암상업은행 부사장을 지냈다.

대한 필요성은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문제다.

넓은 의미에서 동북아의 번영은 글로벌화를 통해 이뤄졌다. 자유 무역, 투자, 사람, 생각 등의 세계화를 통해 이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영국 등 전통적으로 글로벌화, 자유 무역을 선도한 국가에선 이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다음 변화를 선도할 ‘챔피언’을 찾는 것이다. 한국은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국제 무역 활성화를 통해 한국은 많은 성장을 거두었다. 이것을 더 성장시키고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만일 한국이 TPP에 참여한다면 다자체제의 원칙을 잘 유지하며 협상 및 협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TPP 가입을 희망하는 소규모 국가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다.

평화 정착을 위한 학자, 싱크탱크의 역할은?

학자, 싱크탱크는 국제 사회의 ‘양심’과 같은 중요한 역할이다. 글로벌화, 자유

무역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여 평화 정착 및 번영 모색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이들은 지역 내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가장 중추적인 원동력이다. 대중이 편파적인 정보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학자와 싱크탱크는 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

제주포럼이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평화와 번영 촉진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의 차이를 인식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가치를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모든 국가가 동일한 것을 생산한다면 교역이 비활성화될 것이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번영도 없어지고 만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한다면 대화나 토론이 의미가 있을까?

제주포럼은 매년 다른 분야, 다른 국적의 여러 사람들이 참가해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다. 대화는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의 시작이고 이것이 곧 배움이다.

나는 몇 해 전 제주포럼에 대해 처음 알게 됐는데 그때 한 세션에서 지방 정부-대학 간 역사 및 전통문화 분야 민관 협력을 통한 관광 진흥에 관련된 내용을 듣고 매우 고무된 적이 있다. 관광업은 태국의 주요 산업이지만 지금은 포화상태이고 차기 고급 관광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상품의 결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주도과 마찬가지로 태국은 깊은 전통과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나는 종종 관광 관련 강연 기회가 있으면 제주의 사례를 예로 들곤 한다.

내가 제주포럼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듯 누군가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이 대화 플랫폼의 역할이다.



통권 제3호 2016-3 | 발행 2016년 12월 9일 |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등록 제 652-2008-00002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우) 63546 | 전화 064-735-6533 | 팩스 064-738-6539 |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 디자인·제작 DesignZoo

© 제주포럼 사무국 이 글은 2016년 5월 25~27일 열린 제11회 제주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제주포럼 사무국이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비매품>

JEJU FORUM REVIEW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635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33 Fax 064-738-6539 Email jejuforum@jpi.or.kr Website www.jejuforum.or.kr
Facebook www.facebook.com/jejuforumpp Blog <http://blog.naver.com/jejuforum>

〈 비매품 〉



9 788993 764123 94340
ISBN 978-89-93764-12-3 (전 4권)